정때문에… 위증 했다간 순식간에… 전과자 된다

광주지법, 위증 엄벌 잇따라

노래연습장 주인 A(40)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L노래연습장에서 손님 K(41)씨 등에게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주고 술을 판매했다.

A씨는 이 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꼼수를 부렸다. 손님이었던 K씨 등에게 "도우미 부분은 빼주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씨 등은 판사 앞에서 선서까지 한 뒤 아무런 거리낌없이 "당시 도우미는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

이는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A씨는 위증교사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최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거짓 증언을 한 K씨 등 2명도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함께 받았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거짓 증언 한마디로 전과자가 된 것이다.

음식점 업주인 K(45)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종업원 C(여·47)씨가 손님 Y(여·46)씨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했다.

K씨는 법정에서 "종업원 C씨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C씨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했다. 하지만, K씨가 이 주점의 영업사장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K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엄해지고 있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증언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나 정(情) 때문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실한 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은 올들어 지난 4월 현재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24명(항소포함)을 접수해 이중 7명에 대한 재판을 마쳤다. 법원은 이중 ▲실형 1명▲집행유예 3명 ▲벌금형 2명 ▲취하 1명 등으로 선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101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48명에 대한 재판을 해 ▲실형 4명 ▲집행유예 35명 ▲벌금형 8명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21일 형사 6단독 재판부를 무고·위증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교 5개 단체 회원 20명이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기독교계도 촛불 들었다

시국 기도회 열고 참여…불교계도 시국 법회 추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이어 광주지역 기독교 단체들도 정부의 촛불집회 강경대응에 맞서 시국 기도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선다.

광주·전남 기독교교회협의회와 농민목회자협회 등 기독교 5개 단체는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국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촛불집회 폭력진압을 중단할 때까지 각 교회별로 시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촛불집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라며 "교인 대표들은 민주의 종각 천막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3일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열리는 '7보 1배'에 참여해 민주의 종각에서 광주지검 청사까지 이동하며 폭력진압 중단과 쇠고기 고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주말인 5일 금남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신도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힘을 모은다는 방침을 밝혀 주말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 불교 사암연합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법회를 여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남동성당에서 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회개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시국미사'를 열었었다. 정평위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연 것은 2004년 이라크 파병반대 이후 4년 만이었다. /안현주·이은미기자 ahj@kwangju.co.kr

대출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술마시고 차 시동 걸었다 '낭패'

운전석 앉았던 광주 40대 음주운전 입건

술을 마신 뒤 승용차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김모(44·광주시 북구 임동)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 비엔날레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정모(36)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했으나 정씨의 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김씨는 정씨와 실랑이를 벌인 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건 뒤 아내에게 운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다.

1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한 아내는 김씨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입건 이유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아내를 불러 대신 운전하도록 했다. 단지 차에 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은 "술을 마신 뒤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고 브레이크가 풀려 스스로 차량이 움직일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정확한 검찰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보신당 난입 폭행 2명 영장 신청키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진보신당 당사 입구에서 현판 등을 부수고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 오모(48)씨와 회원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 단체 이사 박모(45)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오씨 등은 지난 1일 밤 10시 2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보신당 당사 앞에서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던져 아크릴 소재 정당 간판을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당직자 이모(44)씨 등 8명을 '빨갱이들'이라며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진보신당측이 "단체 사무총장이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봉고차로 조직적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연합뉴스

'가짜 한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판매 음식점 부당이득 명확…승소 가능성 높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광주시 서구 H 음식점을 상대로 집단배상을 요구키로 한 가운데 소송 방법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광주 경실련과 광주 YMCA가 H 음식점 이용 피해자를 모집한 결과 2일 현재 30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들 중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던 기간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H 음식점을 이용한 피해자는 18명. 이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상품권, 포인트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과 YMCA는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음식점에 배상을 직접 요구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시민단체에 무료법률 자문을 제안한 광주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배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형사소송을 통한 합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후 업주와의 화의를 통한 배상 등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소송은 배상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그럼에도 배 변호사는 형사·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H 음식점은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명확하고, 이윤을 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쇠고기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도 승소의 이유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인터넷서 고객 명단 구입 사기 행각

쌍나팔

○…영광경찰은 2일 내비게이션 교체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장모(3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9일 내비게이션 이용자인 황모(53)씨 등 15명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속인 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들 명의로 15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내비게이션 구입 고객 명단을 인터넷상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뒤 이 중 구입 시기가 오래된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이들은 경찰에서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우연히 동기를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 /영광=조익상기자 ischo@